

MB 실용외교의 난맥과 한중관계의 경색

박홍서 | 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정치분야에서도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6월 G20 금융정상회의까지 총 29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관계 못지않은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중 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는 이러한 비약적 발전이 무색하리만큼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한중간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내정문제”라고 일축하였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마늘분쟁’이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같은 ‘하위정치’에서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치 안보 문제에서 한중간 갈등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한중관계 경색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현상은 국가간 역학관계(구조) 속에서 특정 국가가 어떠한 선택(행위)을 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새가 달라진다. 한중관계 경색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란 행위자가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한중관계의 경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간 역학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관계는 그 핵심적 분석 대상이다.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의 출현과 한반도

18세기 임마누엘 칸트가 꿈꿨던 세계정부는 21세기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요원하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정초된 주권 규범조차도 현실에서는 무수히 위배되고 있다.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가 판치는 무정부적 상태라면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결국 '자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국의 힘은 궁극의 생존수단이며,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세력 관계에 민감해져야만 한다. 뉴턴의 중력법칙이 국제정치에도 투영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국제정치는 결국 강대국들의 '놀이'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의 거시적 구조는 강대국들간 세력관계의 소산이며, 약소국들은 그러한 구조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비련한 객체들인 것이다. 약소국이 강대국들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독자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고층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는 유아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대가치고는 어리석을 만큼 크다.

최근 한중관계의 경색의 배경에도 미중관계라는 강대국간 역학관계가 숨어 있다. 주지하듯, 미국은 국제정치의 지배국가다. 20세기판 '30년 전쟁'이라 할 수 있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패권이 몰락

하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은 하위 파트너와 협조를 통해 자국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 관리하였다. 역사상 어느 제국도 그 비용문제로 국제질서를 단독으로 유지 관리할 수는 없었다. 로마제국도 로마적 세계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변 게르만 왕국의 협력을 필요로 했으며, 19세기 대영제국도 유럽의 기타 강대국과의 협조체제를 필요로 하였다. 사실, 전후 미소 냉전체제도 소련이라는 파트너를 끌어들이며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분담시키려는 패권전략의 일환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을 소련이 관리하는 '게토'로 인정함으로써 자국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단순히 미국의 승리라기보다는 이러한 미국의 헤게모니 관리 전략이 장애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일한 슈퍼파워로 자리매김한 미국은 이제 소련이 분담해 왔던 헤게모니 유지비용을 온전히 홀로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1차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리고 북핵문제에 이르기 까지 각종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리는 '고독한' 슈퍼파워 미국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7-80년대부터 베트남전 패착과 무역·재정 적자의 심화라는 헤게모니 위기에 처한 미국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이 소련을 대신해 개방개혁 이후 무섭게 부상한 중국을 협조체제의 새로운 파트너로 끌어 들인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미 1972년 닉슨-모택 동간 상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유지의 핵심적 파트너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건으로 미중관계가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중국 포용정책은 클린턴, 부시,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특히, 2005년 9월 줄릭 미 국무부 차관이 언급한 '이익상관자(stake holder)' 개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간결하게 요약한 개념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였

다. 2008년 금융위기시기 집권한 오바마 정부에게도 중국의 협조는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국 역시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1978년 11기 3중 전회 이후 중국의 국가목표는 ‘하나의 중심(경제발전), 두 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개 노선 견지)’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최고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원만한 대미 관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은 기실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편승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1995-96년 대만해협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국의 강경한 외교행태가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등 장기적 국가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만해협위기는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과 1997-98년 장쩌민-클린턴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원만한 대미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3년 제시한 ‘화평굴기론(和平?起論)’ 역시 결국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외교적 고백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게 20세기 초 수정주의를 지향했던 독일과 일본의 말로는 선명한 역사적 교훈일 수밖에 없다.

미중 상호간 이해관계의 부합은 양국간 협조체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중 협조체제는 국제정치에 대한 과점적 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미중간 카르텔이라 할 수도 있다. 최근 회자되는 G2, 차이메리카, 그리고 이익상관자 개념은 미중 협조체제를 묘사하는 다양한 라벨일 뿐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핵억지

력을 갖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협조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다. 상호 협조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양국 모두에게 보다 크기 때문이다. 물론, 협조체제가 반드시 일치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강대국간 카르텔이라면 그 최대 목적은 공멸을 피하지는 것이지 갈등을 일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 협조체제는 그 안에 갈등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정학적 포위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미국은 현재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조정·강화해 대만문제에 개입하고, 중국의 주변국인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관계증진, 아프가니스탄 침공, 키르기스스탄, 몽골,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 타겟이 중국이라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도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차단해야할 합리적 동인을 갖는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만문제 개입을 비판하고 아울러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 구축에 적극적이다. 중국이 전통적 친중국가인 북한, 미얀마,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주도한다거나,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는 이러한 전략적 이유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를 게임이론으로 요약하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행위자가 불안정한 '파레토 최적'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일반적인 균형점은 두 행위자 모두 배반을 하는 차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게임의 두 행위자가 서로 협력한다면 양쪽 모두에 더 유리한 파레토 최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역시 상호간 불신으로 인해 초래되는 차악적 상황(헤게모니 분쟁)을 회피하고 상호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차선적 상황(협조체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

대방의 배반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미중 협조체제는 언젠라도 붕괴될 수 불안정한 상태이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간 협조체제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되는 핵심지역이다. 각각 한국과 북한의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 분쟁은 상호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말 개최된 미중간 전략경제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양국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한반도 안정에 대한 미중간 공감대는 1885년 청일간 천진조약이나 1945년 미소간 신탁통치 계획과 논리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간 협조체제의 전형적 사례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안정에 대한 공감대는 미중 양국간 전면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안정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상대방의 배반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의 세력권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합리적 동인을 갖는다. 실제로, 중국이 1999년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상화하고 이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거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동떨어져 이해될 수 없다. 더욱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의 세력권을 잠식하려는 의도마저 보이고 있다. 1999년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꾸준히 대북 관계개선을 모색해 왔다. 중국 역시 경제적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

한다거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용인발언에 대해 중국이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거나, 반대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사실 등은 자국의 세력권이 상대방에게 잠식당할지 모른다는 미중 양국의 우려를 반증해 준다.

최근 한중관계의 경색은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의 맥락과 동떨어져서는 결코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한중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히 경색되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미중 협조체제라는 구조와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조지은’의 환생과 한중관계의 경색

최근 한중관계의 경색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 원인으로 천안함 사건을 꼽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 신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천안함 사건은 한중관계 경색의 사례이지 그 원인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실용외교는 애초부터 대중국 외교에서만큼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실용외교는 관념적 정체성이 아니라 물질적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대외관계를 수립하는 공리주의적 외교라 할 수 있다. 즉, 실용외교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에 기반해 결과의 합리적 수익계산에 따라 현실주의적 대외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떠한 외교정책이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을 제고시켰다면 그

동기나 이념이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현재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원만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실용외교의 핵심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만큼 친중노선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미중간 세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한 부상하는 중국의 불확실한 대외행태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서라도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전통적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그러한 임무완수에 실패해 왔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관념적’ 친미노선에 그 핵심적 이유가 있다. 미중간의 갈등적 협조체제를 객관적으로 독해하려는 노력 대신 이미 미국은 우방이며 중국은 위협세력이라는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선협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 및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의 역사로 인해 한국의 주류세력에게 친미 외교노선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친미 이데올로기라는 ‘적합성의 논리(logics of appropriateness)’가 결과의 논리에 기반을 둔 진정한 실용외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초 호란기 조선의 상황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명청간 세력전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해군 정권은 명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에 대해서는 기미정책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적 외교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서인세력을 주축으로 한 조선내 주류세력은 광해군 정권이 재조지은(임란시 명이 조선을 구원한 은혜)을 저버렸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통해 친명적 인조정권을 수립하였다. 주류엘리트들의 친명 이데올로기가 광해군의 실용외교를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은 정묘·병자호란이라는 참혹한 환란으

로 국가이익의 심각한 훼손을 경험해야만 했다. 사실, 현재 미중간 협조체제가 안정적인 상황(파레토 최적)이라면, 한국은 보다 쉽게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미중관계가 갈등적 상황(내쉬균형)이라도 이것이 반드시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중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소위 '약자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이 점유한 의회에서 소수정당의 캐스팅보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러한 미중간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사실, 미중 양국 모두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천안함 외교로 한반도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약소국에 의해 자신들간의 안정적 협조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반길 강대국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이 절실한 중국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수용하기 더욱 어렵다. 중국 관영언론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유치하다'고까지 비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미중 협조체제가 공고하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미국과의 협조하에 적절히 관리할 수도 있다. 동맹국에 대한 연루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도 내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협조체제의 갈등적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중국에게 실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선봉자역할을 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승격시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핵심 타깃인 중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갈 수밖

에 없다. 아울러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드러나듯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에서 북한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의 북한진공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향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대로 대중국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만 전력할 것인가? 국제관계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변도 외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변도 외교를 추구하는 국가는 자칫 모든 국가들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 중국의 대소일변도 외교가 결국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귀결됐듯이 일변도 외교의 유일한 대안은 자력갱생이라는 비합리적 국가발전전략일 뿐이다.

한미 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간 전략적 의사소통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강화가 대중국 견제의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안보기제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구조를 공식적으로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 안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사고의 결과인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역내 경쟁국가인 일본의 재무장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사실, 1949년 국가수립 이전 항일전쟁의 선명한 기억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통한 일본견제라는 ‘이이제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내용 중 직접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참여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에 근거해 대만 해협에서 중-대만간 분쟁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분쟁상황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의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 역시 자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변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 및 강조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헬무트 콜 서독 정부는 동독의 핵심 동맹국인 소련과 고위급 외교를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였고, 결국 동서독 통일에 대한 소련의 용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은 독일 통일 당시 쇠락하던 소련과 달리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슈퍼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중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이 향후 획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6자회담에 연계해 버림으로써 스스로 출구전략을 막아버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사실, 중국과 미국 모두 천안함 사건을 통한 동맹관리라는 수익계산을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듯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미국으로부터도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하다. 아울러 그 개최를 한국외교의 위대한 성취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주요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 개최가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제로 제고시킬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외교 그 자체라기보다는 ‘외교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작년 G20 정상회담이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외교 이벤트에 대한 자화자찬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 역학관계를 정확히 읽고 합리적인 정책을 산출, 추진하는 것이 조용하지만 훨씬 내실 있는 외교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간 역학관계는 거짓말을 안한다. 고상한 국제정치 이론을 떠나 2천5백년전 펠로폰네소스전쟁부터 현재의 이라크 전쟁까지 지난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국제정치의 핵심적 독립변인인 ‘파워’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적 자기희망에 도취된 외교는 반드시 그러한 외교를 추구하는 국가의 생존을 심각히 위협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2년여의 길지 않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정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절실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흥서 | 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교수